민주당 최소 3명 장애인 비례대표 배정 요구

장애인위원회, '21대 총선 요구 결의안' 의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최근 '전국장애인위원회 워크샵'을 갖고 21대 총선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 후보와 정책에 관한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이 있었다.

그 동안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당에 대한 기여도와 범장애인계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구색맞추기식 차원의 배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그마저도 배려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 21대 총선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소외계층과 약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 발전과 총선승리, 나아가 문재인정권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선두에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내년 총선 장애인비례국회의원 후보 전략 토론에서는 그동안 범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하는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결의문'에는 ▲전체 인구대비 5%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원 배출 목표, 최소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배정 ▲범장애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선출 요구 ▲장애인 당원의 의견을 모은 상향식 공천과 이를 위한 당내 시스템 구축 요구 등 3개가 담겼다.

한편,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정책비젼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21대 국회에 장애인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비젼들을 실행한다.

신봉우 기자

충주서 발달장애인 범죄 혐의 경찰 조사과정 '논란'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충북 충주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자영)는 13일 발달장애인 A씨(25)가 누명을 쓰고 경찰에 의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이다. 휴대전화로 거리 사진을 촬영하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에 대한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게 장애인 부모들의 목소리다.

당시 경찰은 전담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채 신뢰관계인의 참석도 없이 A씨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지능 수준의 지적장애인이 전담조사관에게 조사받지도 않았고, 신뢰관계인도 없는 상황에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반향어'를 주로 사용하는 점도 사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향어'는 상대방에게 방금 들었던 말이나 문장을 특별한 의도나 의미 없이 반복하는 말이다.

여기에 A씨는 지극히 여성 성향으로 이성보다는 동성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게 A씨 주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경찰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번 일과 관련해 전담경찰관을 여경으로 교체하고 부서 수사팀 전원에게 발달장애인 조사요령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성료

광주시는 13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2019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에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체 30여곳이 참여했다.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직자 채용 면접을 하고 일자리상담관, 일자리탐색관, 일자리체험관, 일자리교육관 등을 마련해 다양한 일자리와 생산품을 선보였다.

일자리상담관은 '취업하JOB이벤트존'을 마련해 취업 컨설팅,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일자리탐색관은 광주지역 기업, 직업재활시설 채용 관련 맞춤형 1대 1 면접을 진행했다.

일자리체험관은 바리스타, 수납정리, 장난감 세척, 대형마트 매장관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등 직무를 만나볼 수 있다.

일자리교육관은 2020년 복지일자리 사업 안내와 근로기준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특강이 열린다.

광주지역 장애인 근로자는 시가 지원하는 근로사업장 5곳, 보호작업장 21곳, 생산품 판매시설 1곳 등에서 760여명,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복지 일자리에 380여명이 일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전남도, 전국 첫 재난·생활정보 음성알림 서비스 개시

스마트 음성알리미 보급…시각장애인 등 안전 향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오후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홍원의 한전산업개발㈜ 대표와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가 재난재해, 주민생활정보 등을 음성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에서 첫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정식 보급키로 했다.

도는 1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홍원의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영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전남지부장, 배기술 대한노인회전남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모바일 앱 개발·보급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는 도민에게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알리는 모바일 앱이다.

그동안 지진, 해일, 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문자전송시스템(CBS)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 특성상 즉시 확인이 곤란해 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정소식이나 긴급상황을 전파하고 있지만 야외 활동 중인 도민에게는 직접적 전달이 어려웠다.

도는 지난 8월 한전산업개발 측에 스마트폰을 통해 마을방송처럼 정보를 전달할 앱 개발을 요청했다. 이에 한전산업개발은 사회공원차원에서 앱을 개발해 무료로 공급키로 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앱 개발을 완료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도는 11월 말부터 이?통장,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0년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준 한전산업개발에 감사하다"며 "앱이 보급되면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도정정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원의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전라남도의 선구자적 역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가 전남지역 40만 어르신과 1만 4000여 시각장애인 한분 한분을 포함한 190만 전남도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